

野 ‘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與, 13兆 예산 필요... 재정건전 해쳐 “소비진작 효과는 3~4兆 뿐 한 달정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

野,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신청 종결 후 노란봉투법도 처리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 기초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을 왜 도돌이표처럼 올리나”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오늘 상정된 불법현금살포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지

난 5월24일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 한 달 동안 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물가를 자극해서 올려서 결국 지급을 단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민간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이 때문에 소비가 더욱 더 줄게 된다”며 “조삼모사에 도둑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표현했다.

배 수석은 이날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를 마구 넓혀서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는 초법적인 법안”이라며 “불법행위를 무죄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인 법이자 무차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에 나아가 가족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노경필·박영재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겠다”며 “그러나 보수의 걱정, 대안, 분석도 받아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5만원의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액의 20~30%만이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25만원은 13조원 혹은 17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략 3~4조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당연히 한 달 정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소비자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 소비는 이미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신청하고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결,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어, 이르면 내일(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사각지대 해소안에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하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권영진 “큰 틀서 합의보고 소위 진행” 피해자에 민간주택 공급 방안 제시 野, ‘선 구제 후 회수’ 합의점 찾을 것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쟁점 사항까지 논의하지 못했다”며 “소소위는 아니지만 별도의 팀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소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회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정부가 새로 제시한 전세사기 대책을 바탕으로 여야가 논의해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당론 법안인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으로 각각 ‘경매 차익 지급’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위 소위에서 각자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진 못했으나 민주당은 “경매를 통한 차액 지원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꼭 담겨야 한다”며 협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의 방안에는 일부 공감하나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우려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번엔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방안이 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야

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경매 차익 지급방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 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려하던 사각지대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틀에서 다음 논의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가능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절박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안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 안에서 정부안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정점식 “당 분열 막기 위해 정책위의장직서 사임”

정점식 침묵 길어지자 압박 거세져 韓 “민심따라 당 변화 모습 보여줘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임면권을 가진 정무직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끝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한 대표 측 입장에선 친윤(친윤석열)계인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교체하면 최고위원회의 구성을 친한계 5명, 친윤계 4명으로 만들어 유리한 지도부 구성이 가능하다.

정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선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7월31일) 국민의힘에 사퇴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 정책위의

장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와 정 의장 사이 따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밤중에(사퇴를) 고민하셨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고민할 것이 있나”라고 답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당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정책위의장의 침묵이 길어진 만큼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의 사퇴 압박도 거세졌다.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인선과 관련해 힘을 실어줬다고 보는지에 대해 “주요 당직자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서 “특히 서범수 사무총장, 정점식 의장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

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정 의장의 사퇴 시한에 대해 “우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시기를 정하는데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범수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긴 침묵을 깨고 사퇴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한동훈 대표를 지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을 갑자기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서범수 사무총장의 사퇴 요구)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를 많이 했다.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하는 게 맞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원내기구,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가 설치돼 있다. 당 기구가 아니라 원내기구인 것”이라며 “당헌상 임기가 규정돼 있

는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내게 보직이 유일하고,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책위원회는 당 대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논의해 결정했고, 그러다보니 시일이 걸렸다는 것이 정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서예진 기자 syj@